



민속놀이 체험하는 어린이들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어린이집원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텃밭 공천률, 지방권력 교체 최대 변수

2026 지방선거 전망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최근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여느 때보다 분주해졌다.

최장 10일에 달하는 이번 추석 연휴는 지역민에 얼굴을 알리며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들어서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는 한편 여당 텃밭인 광주전남은 집권 초기 '개혁'에 대한 지지도를 읽을 기회가 될 전망이다.

4년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에서 승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곳을 얻는데 그쳤다.

지난 6월 집권여당이 돼 '내란종식'을 외치는 민주당이 4년 전 패배를 설욕할지 '민주당 입법독재'를 외치는 국민의힘이 지방권력의 우위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전남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조국혁신당 재건 속도', '민주당 텃밭 경선률 변화'가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입지에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를

혁신당 경쟁·중대선거구제 지선판 '흔들' 민주당, 4년 전 전국 선거 패배 설욕 준비 이재명 정부 평가·개혁 지지도 바로미터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달 2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 광산구 등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도입된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 정당의 의석 독식 현상 같은 지역주의 완화는 물론 사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무투표 당선도 근절될 수 있다.

또 지난해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해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내년 광주전남 지방선거는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광주전남 지방선거는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20% 안팎에 걸쳐 무소속 후보나 진보당, 정의당 등 소

수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당이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고 경쟁할 태세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영광·곡성 군수 재보선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고, 올해 도입된 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 당선을 대부분 확보하면 역대 구도와 달리 일부 선거구에서는 본선에서 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고 지난 2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같은 당 서양진 의원은 "지금은 지방선거보다 당내 해신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보다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개혁 성향 정당의 선거연합

을 통해 극우 내란정당 국민의힘 심판하는 한편 호남에서는 혁신경쟁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당은 최근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해 당 지지도가 추락해 선거 전까지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한 가지 변수는 민주당이 핵심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경선 톨을 타 지역과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다.

당 경선에서 민심과 괴리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돼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옷을 입고도 고전하거나 낙선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책임 시절 지난해와 올해 호남에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른 뒤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고, 그 뜻에 따라 당이 이를 비중 있게 논의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주식 특집호 지면안내

- 2026 지방선거 누가 뭐냐... 3~10면
- 광주, AI 2단계 사업 박차... 16면
- 전남 서남권 RE100... 17면
- 광주·전남 가볼만한 곳... 18~19면
- 가볼만한 문화 산책... 20면

국가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화

김영록 지사 "전남 핵심 전력망, 국가기간 설비 지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는 전남지역 송변전 계획 설비가 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됐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1차 전력망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

신해남~신장성 96km 구간과 신해남~신강진 27km 구간 등 총 123km 송전선로를 비롯해 서해안 HVDC(고압 직류선)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45kV 이상의 핵심 송변전 설비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35개 인허가 특례로 관련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일부 사업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개선, 도로 등 SOC 공동 건설 추진

등 법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도 강화되며, 통상 13년이 소요되던 전력망 구축을 표준 공기 9년으로 단축, 4년이나 앞당겨 설비 구축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출력제어 문제가 해소되면 전남 전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유치에 이 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핵심 전력망 설비를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로 신속히 지정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도내 산업단지

와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 체계가 구축돼 기업과 도민이 더 저렴한 전기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산단 근로자 천원 아침밥' 전국 확산

정부 국정과제 채택...12월까지 시범운영

광주에서 정부의 '2025 산단근로자 천원 아침밥'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뒤 국정과제로 채택된 노동복지 분야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단근로자 천원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20개 산단에서 신청해 이 중 16개소(단체형 5, 개별형 11)를 최종 선정했다.

광주시는 단체형으로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저렴하게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하남산단에 1호점 문을 연데 이어 2024년 첨단산단에 2호점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김밥·샌드위치·샐러드를 2000~3000원에 판매하던 방식에서 사업 지침에 맞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김밥만 1000원에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석달간 운영되며,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2개소에서 월~금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는 내년 상반기 평등산단에 3호점을 개소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연휴 추석 날씨								
2일(목)	3일(금)	4일(토)	5일(일)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자료제공: 기상청)
17~25	17~23	20~27	21~27	21~27	19~26	19~26	19~28	

10월 3일~9일자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